

집값 안정 위해 꺼낸 용산공원 주택… 정치권 ‘찬반 격돌’

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회의
녹지 가능 상실지역에 주택공급 검토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당정이 19일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울 집값 급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으로 짜늘하게 식은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캠핑크(전 주한미군 주둔 부지)와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본회의에) 올라간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핑크 공급물량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이번 8·13 공급대책에선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회 용산국제업무지구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용산

어린이정원이나 용산공원 일부 지역의 녹지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난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 큰 땅을 다공원으로 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치안 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공공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 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어버리고 주택을 짓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 문제는 보존해야 할 녹지에 손을 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 일정하게 훼손이 돼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의와 공론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7월에 제정됐다. 1조, 2조, 4조에 보면 공원 외 용도변경이나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정신을 우선 살려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함부로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존 물량 착공과 민간 규제 합리화가 우선”이라며 “(용산공원 부

지는) 오염 정화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부터 거쳐야 한다. 이곳에 언제 착공할지 장관님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은 대도시의 대규모 마지막 녹지 공간”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구청, 서울의 많은 국민들이 도심 녹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매칠 전에 (김 장관이) 용산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재고를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기자들이 한 질문의 핵심이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여부였기 때문에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녹지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원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내)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구방사청 부지도 있고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강행 우려”

(서울시장)

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
“여가·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시와 충분한 협의 하지 않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9일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 검토한 데 대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 시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용산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권 의원은 녹지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1인당 5.7㎡에 불과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이미 확실하고 검증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주택) 공급 대안이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정부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법령상으로도 (서울시는) 협의권자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에 정부, 국토부와 합의가 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만 호를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0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 호를 잡아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용산 공원에 또 1만 가구,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 보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김민석, 부산서 첫 최고위… 영남 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대표)

봉하·평산 찾아 ‘통합 행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의 장소를 부산로 정하고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전재수 부산광역시청장과 회동한 후 부산광역시청으로 이동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했다. 전재수 시장은 김 대표를 만나 오는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국제연합) 해사총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김 대표는 이에 화답해 최고위에서 2028 유엔(국제연합) 해양총회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지방의회는 소수”라며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지원 감사”
내대표가 19일 지난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정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성호 사의에 개각설… 5~6곳 교체 거론

李, 인적 쇄신 통해 국정 동력 확보
중기부·법무부·국토부 등 검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5~6개 부처에 대해 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2년차인 데다 여당의 새 대표가 들어선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19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8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정성호 장관의 후속 인사를 고심 중이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사의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해온 데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도 통과된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장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면서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많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을 찾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또 한 성숙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재 공석이라, 이 대통령으로 서도 개각 수요가 생겼다.

당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개각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증시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개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과 개각이 맞물리면 인적 쇄신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